# 소송 및 법률자문에 관한 규정(안)

제정 2013.9.30. 개정 2014.7.25.

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소송수행과 법률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소송"이란 공사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소송, 형사소송, 행정소송 등 소송사건과 신청사건, 비송사건 등을 말한다.
- 2. "법률자문"이란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 해석과 적용, 법적 분쟁시 필요한 법률적 의견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- 3. "사건부점"이란 소송 발생의 원인이 되거나 법률자문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영업점을 말한다.
- 4. "법무지원부서"란 공사업무와 관련된 소송이나 법률자문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.
- 제3조(다른 내규와의 관계) 소송업무의 처리와 법률자문에 관하여는 다른 내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제2장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 변호사의 선임

- 제4조(선임의 원칙) ①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전문지식, 소송수행 능력, 이해상충 여부, 관련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임되어야 한다.
  - ② 소의 제기(상소 포함), 취하, 화해 및 피소에 대한 응소 등 소송절차는 직원이 수행하거나 변호사등(공사 직원이 아닌 변호사, 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.

- 제5조(소송대리인 후보군) ① 사건부점장(이하 "부점장"이라 한다)은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등으로 부점별 소송대리인 후보군(이하 "후보군"이라 한다)을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 <u>다만, 후보군의 효율적인 선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수의 부점 또는 영업본부별로 후보군을 공동으로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(개정 2014.7.25.)</u>
  - ② 후보군 구성원의 수는 부점장이 연간 소송규모, 소송대리 위임건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.
- 제6조(후보군의 모집) ① 후보군을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, 응모자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임할 후보군 구성원의 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학회,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에 추천을 의뢰하는 방식 등을 병행할 수 있다.
  - ③ 공개모집 시에는 공사 홈페이지 등에 모집기간을 1주 이상으로 하여 자격요건, 제출서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속한 선정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- 제7조(후보군의 선임) ① 후보군에 속한 구성원의 자격은 2년 단위로 하되,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.
  - ② 공사 임직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(그가 소속된 법무법인 포함) 는 퇴직일로부터 1년간 후보군으로 선임할 수 없다.
  - ③ 부점장은 후보군의 선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야 한다.
  - 1. 공사 업무에 대한 이해도
  - 2. 공사업무와 관련된 소송수행실적
  - 3. 소송수행능력
  - 4. 공사와의 이해상충 여부
- 제8조(청렴성 검증 등) ① 후보군을 선임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징계내역 전력 조회 등을 통해 청렴성을 검증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내역 조회결과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았거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변호사등을 후보군으로 선임하여서는 안된다

- ③ 부점장은 후보군 선임 시 구성원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금지행위 위반 시 선임을 해지하는 <별지1> "청렴서약서"를 받아야 한다.
- 1. 금품수수 금지, 부당한 알선·청탁 금지
- 2. 공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
- 3.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
- 4.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
- 5. 기타 공공기관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
- ④ 후보군 선임 후 범죄행위로 인한 형 확정, 징계 처분 등을 받은 경우 선임을 해지한다.
- ⑤ 후보군으로 선임된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이해충돌이나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전에 공사에 이를 신고하여 소송을 수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1. 공사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의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경우
- 2. 공사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등에서 자문·고문,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
- 3. 공사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를 관리·운영하는 경우 등
- 제9조(위임계약) ① 사건부점은 제7조에 따라 후보군으로 선임된 변호사등 과 <별지2> "소송 등 위임에 관한 계약서"에 따라 부점장 전결로 위임 계약을 체결한다.
  - ② 전항에 따라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당해 부점에서 보관하여야 한다.
  - 1. 변호사 자격증 및 등록증 사본
  - 2. 사업자등록증 사본
  - 3.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(소지한 경우에 한함)
- 제10조(소송대리인의 선임) ① 제4조제2항에 의해 변호사등에게 소송수행을 위임하는 경우 부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보군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.
  - 1. 소제기 기간경과가 임박하는 등 긴급한 경우
  - 2. 소송대리인 후보군 중 수임 희망자가 없는 경우

- 3. 제15조제3항에 따라 법무지원부서에서 소송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
- 4. 경쟁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
- 5. 사내변호사 등 후보군의 구성원이 아닌 변호사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소송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
- ② 소송의 위임은 특정 변호사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운용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소송수행결과 평가 등) ① 부점장은 선임된 후보군 구성원에 대해서는 매년 소송수행 결과를 평가하여 후보군 재선임 여부 결정시 반영하여야 한다.
  - ② 후보군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임을 하여서는 안된다.
  - 1. 공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2. 업무수행태도가 태만하거나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3.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2년 연속 하위 20%에 해당되는 경우
  - 4. 기타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
- 제12조(평가위원회) ① 제7조제3항의 후보군 선임 및 제11조제1항의 소송 수행결과 평가를 위해 <u>후보군 구성단위별로 3인 이상의</u> 소송대리인평가 위원회(이하 "평가위원회")를 둔다. 다만, 제7조제3항에 따른 평가시에는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여야 한다.(개정 2014.7.25.)
  - ② 제7조제3항에 따른 평가는 <별지3> "제안서 평가표"에 의한다.
  - ③ 제11조제1항에 의한 평가는 <별지4> "변호사 소송수행 평가표"에 의한다.
  - ④ 제7조제3항에 따른 평가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공사의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(신설 2014.7.25.)
- 제13조(법률자문) ① 공사 업무 전반에 관한 법률상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 변호사를 둘 수 있다.
  - ② 자문변호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  - ③ 법무지원부서는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문변호사와 <별지5> "법률자문 및 소송위임 계약서"에 따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제9조제2항의 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

- ④ 사건부점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지원부서에 자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건부점에서는 자문요청의 배경, 질의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.
- ⑤ 사건부점은 자문이 완료된 경우 <별지6> "법률자문결과 평가표"에 따라 자문결과를 평가하여 법무지원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지원부서는 평가결과를 자문변호사 선임기간 만료 시 연임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.

### 제3장 소송의 보고

- 제14조(소송보고) ① 사건부점은 다음 각 호의 소송을 제외한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모든 소송에 대하여 <별지7> "소송보고"에 따라 법무지원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- 1. 민사소송 중 주택보증구상금청구소송, 양수금청구소송
  - 2. 신청사건
  - 3. 비송사건
  - ② 보고는 제소의 경우 소제기 전, 피소의 경우 피소 직후에 하여야 하며, 특히 피소사건에 대하여는 신속히 보고하여 응소기일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. <u>다만, 시효가 임박한 경우 또는 제19조제1항 단서에</u> 해당하는 소송의 경우로서 처리기한이 촉박한 경우에는 먼저 제소 또는 응소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.(개정 2014.7.25.)
- 제15조(처리방향의 결정) ① 법무지원부서는 소송보고사건에 대하여 중요 도와 대응방향 등을 결정하여 사건부점에 통지하여 참고토록 한다.
  - ② 소송보고사건은 다음과 같이 중요도를 구분한다.

λ <b>ι</b> (	· 소송결과에 따라 공사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
(上)	· 공사업무 처리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건
	· 동일유형의 사건과 관련된 대표소송
중(中)	· 대내외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소송
	· 기타 업무처리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특이사건
하(下)	· 중요도가 상, 중에 해당되지 않는 사건

③ 사건부점은 사건중요도에 따라 중요도가 상 또는 중인 경우 법무지원

부서에서 지정하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, 사건중요도가 하인 경우 후보군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자체선임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④ 법무지원부서는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한다.
- 제16조(사건진행 보고) ① 사건부점은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필요한 경우 사내변호사 및 자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활용할 수 있다.
  - ② 보고한 소송이 종결된 경우 사건부점은 매 심급별로 소장 사본과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무지원부서에 신속히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.

### 제4장 소송심의회

- 제17조(구성) ① 심의회는 기획조정실장, 법규팀장 및 각 사업부서 실무팀장, 사내변호사 등으로 구성한다.
  - ② 기획조정실장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된다. 다만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규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18조(기능)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- 1. 소송보고사건의 중요도(上, 中, 下) 판단
  - 2. 특별보수 지급 필요성
  - 3. 기타 소송 수행 시 고려할 사항
- 제19조(운영) ① 심의회는 제14조에 따라 소송이 보고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다만, 대응방향이 명확하거나 단순한 소송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송의 경우 심의회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.
  - 1. 파산면책이 확정된 채무자가 제기한 채무면책확인소송
  - 2. 사해행위취소소송
  - 3. 배당이의소송
  - 4. 동일 부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미 심의회를 통해 대응방향이 결정되어 진행 중인 소송과 동일유형의 소송

- 5.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에 상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
-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건부점 담당자 등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③ 법규팀장은 심의회의 논의사항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출석한 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

### 제5장 보수의 지급

- 제20조(소송착수금) 소송위임변호사의 소송착수금은 대법원의 "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"에서 정하는 요율의 범위 이내에서 지급한다. 다만, 최고금액은 20백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.
- 제21조(승소사례금) ① 부점장은 제20조의 단서적용을 배제하여 계산한 금액과 기 지급한 착수금과의 차액을 승소사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
  - ② 승소사례금은 각 심급별로 적용하되, 공사의 승소(일부승소 포함)가 최종 확정된 때에 소급하여 일괄 지급한다.
  - ③ 일부승소의 경우에는 승소비율이 50%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승소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.
  - ④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해당심급에 해당하는 승소 사례금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  - 1. 소 각하
  - 2. 소 취하
  - 3. 상대방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
  - 4. 무변론판결
  - ⑤ 각 심급별 소송위임 변호사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최종 판결확정 이전심급 단계에서 교체된 변호사에게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제22조(특별보수 지급)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담당임원(또는 본부장)의 승인을 받아 추가 지급할 수 있다.
- 제23조(법률자문 보수) ① 자문변호사에게 서면으로 법률자문을 한 경우

- 그 보수는 1건당 1백만원 이내에서 법무지원부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지급한다.
- ② 소송위임 변호사에 대하여는 해당소송과 관련된 업무질의에 대해서 소송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외에 별도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
### 제6장 소송운영현황의 공개

- 제24조(소송기록의 관리) 사건부점에서는 변호사별 소송위임 현황 및 단계 별 진행상황을 기록·관리하여야한다.
- 제25조(소송운영현황공개) 법무지원부서는 소송수행 등과 관련된 각 호의 사항을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  - 1. 관련 규정: 소송수행 변호사 등의 선임 및 운영 규정 등
  - 2. 후보군 선정현황(성명, 소속, 선정기간 등)
  - 3. 소송대리 현황: 후보군 구성원별 사건위임 건수 등

## 부칙(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규정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4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 선임하는 소송수행 변호사 및 자문변호사부터 적용한다.

### 부칙(1)

이 규정은 201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<별지1>

# 청렴서약서(제8조제3항 관련)

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송대리인 후보군 구성원으로서 당 법무법인(변호사)은 공사가 지향하는 윤리경영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,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.

- 1.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·직원에게 직·간접적으로 금품·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.
- 2. 공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겠습니다.
- 3.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한 이용을 하지 않겠습니다.

위 청렴서약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,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는 제재에 대하여 민·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

20 . . .

서 약 자

직 위 :

성 명 : (서명)

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귀중

#### <별지2>

### 소송 등 위임에 관한 계약서(제9조제1항 관련)

한국주택금융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와 변호사(\_\_\_법무법인) \_\_\_\_(이하 "변호사"라 한다) 사이에 다음과 같이 소송 등 위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위임사무의 범위) 변호사는 공사가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.

- 1. 공사 업무와 관련한 소송수행
- 2. 소송수행과 관련한 질의회신
- 3.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
- 제2조(보수의 지급) ① 제1조 제1호에 의한 소송사건의 수임보수는 공사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.
  - ② 공사는 변호사로부터 소송비용 등에 관한 지급청구를 받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지급하기로 하며, 이 경우 공사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제세액을 원천징수 할 수 있다.
- 제3조(신의성실 및 비밀조항) 변호사는 공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선량한 관리 자의 주의의무로써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공사의 위임사무에 관하여 지득한 일체의 사실을 임의로 타인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.
- 제4조(계약기간) ①이 계약서에 의한 위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하며 위임계약 기간중이라도 공사 또는 변호사의 사정에 따라 서면 통지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 - ②계약기간 만료이전 공사는 소송업무 수행 편의성 및 해당 영업점의 소송업무량, 적정 변호사수, 기타 필요에 의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할 수 있고, 변호 사는 재계약 여부에 대한 공사의 결정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.
- 제5조(사무원 등의 활용) 변호사가 필요에 따라 사무원 등을 활용하는 때에는 당해 사무원 등에 대해서도 본 계약의 내용을 숙지하여 준수토록 지도·관리하여야 한다.
- **제6조(이해상충행위 방지)**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이해충돌이나 사적 이해관계 가 있는 경우 사전에 공사에 신고하고 소송을 수임하여서는 안된다.

- 1. 공사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의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경우
- 2. 공사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등에서 자문·고문,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
- 3. 공사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를 관리·운영하는 경우 등
- 제7조(손해배상)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사무원 등이 공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한 사유 등으로 공사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공사의 청구에 따라 변호사는 그 손해액을 즉시 배상한다.
  - 1.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
  - 2. 고의 또는 과실로 서류작성이나 위임업무 수행에 오류를 발생시킨 경우
  - 3. 기타 변호사의 귀책사유로 공사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
- 제8조(기타사항) 변호사는 인감, 사용인감, 주소 기타 주요사항이 변경된 때에 이를 공사에게 즉시 서면통지 하여야 하며, 변호사가 서면통지를 지연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는 변호사가 부담한다.
  -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,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20 . .

위임자 :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7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○○○ 위 대리인 지사장 (인)

수임변호사 :

## <별지3>

# 제안서 평가표(예시)(제7조제3항 관련)

평가대상: 평가위원: (서명)

	평가기준	배점	매우 좋음 (100%)	좋음 (80%)	보통 (60%)	미흡 (40%)	매우 미흡 (20%)
1. 공사업무에 대한 이해도							
	가. 공사가 수행하는 주택 금융업무의 이해						
	나. 공사업무와 관련한 주요 법적 분쟁의 이해						
	공사업무와 관련된 소송수행 실적						
	가. 구상금(양수금 포함) 청구소송						
	나. 그 외의 소송						
3. 4	소송수행 능력						
	가. 소송업무 수행경력						
	나. 구성인력의 적절성						
	다. 유사소송 수행경험						
합	계						
이히	l상충 유무(○, X)						
	½ 5년 이내 징계 등 └(○, X)						

<sup>\*</sup> 부점장은 해당 부서의 소송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 가능

#### <별지4>

# 변호사 소송수행 평가표(제11조제1항 관련)

평가대상: 평가위원: (서명)

평가 부문	구분	평가기준	건당 배점	해당 건수	총건수	평가 점수	비고
① 기본 점수	기본 배점	-	-	-	-	100	
	수행 성실도 및 수행능력	청구금액 오류	10				
		보정사항 미이행	10				
		항소이유서 등 주요기한 미준수	10				
② 감점 요인		제소기간(1개월) 미준수	10				
		패소판결문 송부지체 (도달일로부터 1주일 이내)	10				
		판결정본 등 송부지체 (판결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)	10				
소계							
	공사업무 기여도	소송보고사건 중 중요도가 상(上)·중(中)인 사건의 승소	10				
③ 가점 요인		새로운 선례의 정립	10				
	소 계						
평가합계(①-②+③)							

### [평가기준 적용 방법]

- 가. 기본배점은 100점으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기간 중 종결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.
- 나. 평가점수는 (해당건수/총건수) \* 100 \* 건당 배점을 적용한다.
- 다. 소송대리인 후보군 운용부점별로 평가하며, 해당 부점의 소송의 성질 등을 감안 하여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 가능

#### <별지5>

### 법률자문 및 소송위임 계약서(제13조제3항 관련)

한국주택금융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와 <u>법무법인</u> (이하 "법무법인"이라 한다)사이에 다음과 같이 법률자문 및 소송위임 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계약은 공사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법무법인에게 법률자문 및 소송위임 업무(이하 "법률자문의뢰 등"이라 한다)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 자문의뢰 등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약정해 두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위임사무의 범위) 법무법인은 공사가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.

- 1. 공사법령 및 기타 업무관련 법령의 해석 등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
- 2. 공사가 요청하는 회의 참석 및 의견제시
- 3. 공사가 요청하는 사건에 대한 소송수행
- 4. 업무관련 임직원 피소사건 법률구조
- 5. 기타 공사의 법률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

**제3조(전담변호사의 지정)** 법무법인은 제2조에서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소속의 ○○○변호사를 공사의 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로 지정한다.

제4조(보수의 지급) 법률자문 및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보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1.	제2조제1호에	따른	자문료(부가세	별도)	<b>:</b>
----	---------	----	---------	-----	----------

- 2. 제2조제3호에 의한 소송수행은 공사의 해당 사건부점과의 별도의 소송위임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서로 갈음하며, 동 소송위임 보수는 공사가 정하는 보수지급 기준에 의한다.
- 3. 공사는 법률 자문료를 매월 말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지급하기로 하고, 제2호의 소송위임 보수는 공사가 정하는 시기에 지급하기로 한다.
- 제5조(비밀유지 의무) 법무법인은 공사의 법률자문의뢰 등에 따라 법무법인에게 제공된 문서 및 자료 등 공사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사의 사전 동의없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. 단, 법원, 행정기관 등 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요구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6조(이해관계의 충돌) ①법무법인은 공사로부터 법률자문의뢰 등을 받은 사항 과 관련하여 공사와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공사 이 외의 자를 대리하거나 법률자문 업무를 제공하는 데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.

②법무법인은 공사로부터 법률자문의뢰 등을 받은 사항이 다른 의뢰인 등과의 사이에 충돌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경우 공사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법률자문 등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이해관계의 충돌여부는 공사가 법무법인에게 의뢰하는 사안별로 개별적·구체적으로 판단하며,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정보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지 아니한다.

제7조 (계약기간 및 해지사유) ①이 계약서에 의한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하며,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'갑'이 별도의 계약연장 통지를 하지 않는 한 자동 만료된 것으로 본다.

- ②계약 기간 중이라도 공사 또는 법무법인의 사정에 의해 서면통지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③제3조의 전담변호사가 변경되는 경우 공사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,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20 . . .

위임자 :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7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○○○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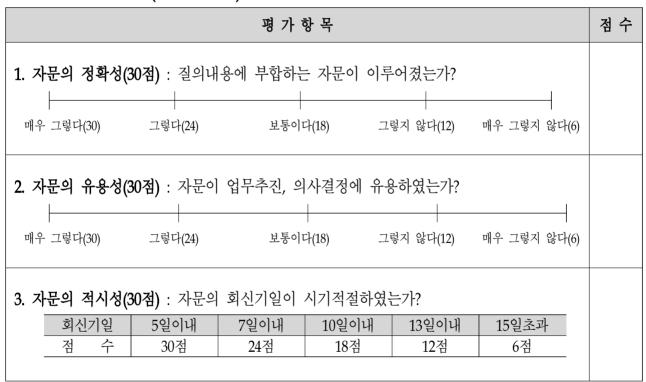
수임자:

#### <별지6>

# **법률자문 평가표**(제13조제5항 관련)

- 1. 자문 건명:
- 2. 자문법인(변호사):
- 3. 평가결과

## □ 만족도 평가(의뢰부서)



# □ 난이도 평가(법규팀)



# **소송보고**(예시)(제14조제1항 관련) ( 년 월 일)

부점장(인	<u>l)</u>

				1 2 ( 2)				
사 건 종 류 (사 건 번 호)			사 건 구 분	제소, <피소>				
관 할 법 원			상 대 방 (소송대리인)	○○은행 (법무법인 00)				
소송물 가액			진 행 단 계	,				
상(√)		- 소송결과에 따라 공시 - 공사업무 처리 전반에	· -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	l 큰 사건(√ ) - 사건( )				
사건 중요도	중( )	<ul><li>동일유형의 사건과 관련된</li><li>대내외 민원발생이 되기타 업무처리방식에</li></ul>	년 대표소송(집단중도금 》 우려되는 사건( ) 영향을 미치는 특이	채무부존재소송 등)( ) 기사건( )				
	하( )	- 소송결과가 단일건에 - 기타 공사 업무에 미치	국한되거나 난이도가  는 영향이 미미한 시	평이한 사건( ) ŀ건( )				
사건개요(	소제기 이	유 및 주요쟁점 등)						
검토의견(승소 가능성 및 근거, 공사 업무에 미치는 영향, 특별보수 지급 필요성 등)								
대응방안								
제도개선 필요여부								
(※ 예시 : 관련 법령, 약관 또는 내규등 개정사항)								

※ 주택보증 구상금 및 유동화관련 양수금 청구소, 신청사건, 비송사건은 보고대상에서 제외